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5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26.

발 의 자 : 김종민 · 백혜련 · 김남국  
김용민 · 박범계 · 박주민  
소병철 · 송기현 · 신동근  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」상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(안 제23조제2항, 제34조제3항 · 제5항, 제54조제3항, 제77조).

##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청”을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34조제3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”을 “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54조제3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77조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고지) ① (생략)	제23조(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방검찰청 또는 지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	제3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
①·②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	⑤ ----- -----

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(피고인은 제외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4조(추정보전명령의 집행) ①

• ② (생략)

③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집행법」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제77조(관할 법원) 이 장에 따른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지방검  
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  
직자범죄수사처-----  
-----.

제54조(추정보전명령의 집행) ①

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검  
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
처-----.

제77조(관할 법원) -----

심사, 물수보전, 추정보전 또는  
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  
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  
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 
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  
사에게 하여야 한다.

-----하고, 고위공직자  
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 
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  
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